# ESG 동향 뉴스 클리핑

## 이슈 검색기간 : 2023.02.03(금) ~ 2023.02.09(목)

제공일시 2023 02 17 Fri
담 당 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
문 의 02 398 7675

산업통상자원부 kpc 한국생산성본부

# ESG 동향 뉴스 클리핑

이슈 검색기간 : 2023.02.03(금) ~ 2023.02.09(목)

제공일시 2023 02 17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

##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

### 1. EU 이어 영국도 탄소국경세 검토…철강 수출 타격 우려

(산업경제, 2023.02.06) 이경은 기자

- 유럽연합(EU)에 이어 영국도 철강 제품에 탄소국경조정제도(탄소국경세, CBAM)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가운데,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음
- 영국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정책을 확정하진 않았지만, 향후 탄소국경세 도입과 함께 자국 철강업계의 친환경·탈탄소 공정 전환을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할 계획임
- 미국 국제무역위원회(ITC)의 무역거래 자료에 따르면, 우리나라가 영국에 수출하는 철강제품 규모는 3억4000만달러 수준으로, EU에 이어 영국으로 탄소국경세 도입이 확대되면, 국내 철강 산업의 수출에 제약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임
- 업계에서는 날로 강화되는 탄소 배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제품 개발, 전기로 사용 확대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

### 2. EU '좀비 화학물질' PFAS금지 검토…반도체업계 반발

(이데일리, 2023.02.08) 김상윤 기자

- 유럽연합(EU) 집행위원회가 '좀비 화학물질'로 불리는 과불화화합물(PFAS)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 검토에 착수했음
- 이 법안을 제의한 독일, 네덜란드, 덴마크, 스웨덴, 노르웨이 등 5개국은 공동성명을 통해, PFAS를 금지하면 장기적으로 제품과 공정 과정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음
- PFAS는 반도체 웨이퍼에 회로 패턴을 그리는 포터레지시트, 에칭 공정에 사용하는 냉매 등에 이용되기 때문에, PFAS 사용을 금지하면 반도체업계에도 타격을 미칠 전망임
- PFAS 금지법안은 약 1년간 검토된 이후, 최종안이 마련된 이후 2026년 또는 2027년 발효될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음

### 3. 美, 전기차 분류기준 변경…제네시스 GV70도 세액공제 받을 듯

(연합뉴스, 2023.02.05) 김동현 기자

- 가격 제한에 걸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(IRA)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던 미국산 제네시스 SUV 전기차도 세액공제를 받을 것으로 보임
- 미 재무부는 3일,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권장소비자가격(MSRP)을 판단할 때 적용하는 차량 분류 기준을 개정하여 기업평균연비제(CAFE)가 아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EPA 연비표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음
- 이 경우, GV70은 SUV로 재분류되기 때문에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가격이 8만 달러를 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
- 외신 보도에 따르면, GM의 캐딜락 리릭, 테슬라의 5인승 모델Y, 폭스바겐의 ID.4, 포드 머스탱 마하-E와 이스케이프 플러그인하이브리드(PHEV) 등이 이제 SUV로 분류돼 가격 상한에 걸리지 않음

## 1. 중국 배터리사, 동유럽에 '기가팩토리' 짓기로…유럽 둘러싼 한·중 '배터리 전쟁' 속도

(경향신문, 2023.02.09) 김상범 기자

- 글로벌 8위 규모의 중국 배터리 업체가 유럽 현지 기업과 손잡고 대형 배터리 기가팩토리를 동유럽에 짓기로 했음
- 9일 업계에 따르면, 중국 배터리셀 제조업체 궈쉬안하이테크는 지난 7일 슬로바키아 '이노뱃'과 배터리셀·팩 생산공장을 짓는 내용의 양해각서(MOU)를 체결했음
- 전기차 선도 시장인 유럽은 한국 배터리사들의 '안방' 역할을 해왔으나, 중국 배터리사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서, 북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전기차 시장인 유럽에도 서서히 발을 들이고 있음
- 중·동부 유럽 일대는 전기차 전환에 한창 속도를 내고 있는 벤츠·BMW·스텔란티스·폭스바겐 등의 생산기지와 가깝기 때문에  유럽 전기차 시장을 둘러싼 한·중 배터리 경쟁에도 가속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음

## 2. 미래금광 폐배터리 재활용…'게임의 룰' 작업 시작됐다

(머니투데이, 2023.02.07) 최경민 기자

- K-배터리 '빅3'가 폐배터리의 수거·재활용과 관련한 '게임의 룰'을 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
- 날로 높아지는 글로벌 환경규제에 적응하면서 2050년 최대 600조원까지 커질 것으로 추정되는 미래 폐배터리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마중물을 마련하는 셈임
-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, LG에너지솔루션, 삼성SDI, SK온은 최근 한국전지산업협회, 환경공단 등과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구성, 사용 후 배터리 관리체계 마련을 논의하고 있음
- 변수는 EPR(생산자책임재활용제) 도입임 EPR이 도입될 경우, 배터리 업체들에 일정 수준의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 의무가 부과되어, EPR 도입과 관련해서는 '신중한 접근'이 요구됨

## 3. MSCI, ESG와 기후 성과 비교솔루션 론칭

(ESGToday, 2023.02.07) Mark Segal 기자

- MSCI가 상장기업의 지속가능성 책임자들이 ESG와 기후목표를 설정하고 진행상황을 추적하며, 데이터를 동료와 비교할 수 있도록 MSCI Corporate Sustainability Insights를 출시했다고 발표했음
- 주요 기능에는 MSCI ESG Research를 시각화하고, 기업 ESG평가, ESG 컨트로버시(논란이슈), SDGs 목표와 연계 여부 등이 포함됨
- 이뿐 아니라 Climate Value-at-R, Implied Temperature Rise와 같은 툴에도 접근 가능한데, 이러한 솔루션들은 기업의 리스크 노출과 글로벌 기후목표를 연계하는 데이터 솔루션임
- 이를 통해 기업별 탄소 관련 약속에 대한 잠재적 공개 격차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, TCFD 기반 경쟁업체와의 비교도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임

## 1. “녹색산업 이집트·오만 수출 추진…원정·재생에너지 균형 찾을 것”/ "전기차 폐배터리도 재활용 의무화 검토"

(뉴스1, 2023.02.06) 황덕현 기자
(BBS, 2023.02.06) 신두식 기자
(매일경제, 2023.02.06) 홍혜진 기자

-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, 올해 3월 발표할 예정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통해 유럽 무역의 장벽이 될 탄소국경조정제도(CBAM)를 극복하고 세계 탄소시장을 선점하겠다고 밝혔음
- UAE 외에 이집트와 오만, 인도네시아 등에도 녹색산업 관련 기술 수출을 추진함 이와 함께 심각한 상황인 남부 지방 가뭄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물 공급망을 촘촘하게 챙기고, 폐기물에서 희소 금속을 추출하는 등 고부가가치의 순환경제 활용 방안도 마련할 계획임
- 올해 방점은 녹색성장과 가뭄, 자연과 조화로운 개발에 집중됐음 한 장관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% 감축을 위해 원전과 재생 에너지의 균형점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음
- 한 장관은 또 전기차 폐배터리를 생산자책임재활용(EPR)에 포함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음

## 2. 환경부, ‘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’ 발표

(가스신문, 2023.02.08) 양인범 기자

- 환경부가 7일 누리집을 통해, ‘한국형 녹색분류체계(K-Taxonomy) 가이드라인’을 발표함
- 녹색분류체계의 원칙은 △환경목표에 기여할 것 △심각한 환경피해가 없을 것 △최소한의 보호장치를 준수할 것 3가지를 제시하고 체계는 ‘녹색부문’과 ‘전환부문’으로 구성됨
- ‘녹색부문’에서는 화석연료를 100% 활용하는 경제활동 및 이와 연계된 경제활동은 원칙적으로 배제함
- ‘전환부문’으로 분류된 경제활동은 총 7개로, 중소기업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활동, LNG 및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, 원자력 기반 에너지 생산(신규건설 및 계속운전), 블루수소 제조, 친환경 선박 건조 및 운송으로 구성됨

## 3. 탄소중립 기술지원단 출범…포스코, 과학 연구기관 ‘기술동행’

(머니투데이, 2023.02.08) 김인한 기자
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 국내 산업계가 탄소중립을 선제 대응하고, 그 과정에서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으로 하는 상반기 내 ‘탄소중립 기술지원단’을 출범함
-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은 8일 포항산업과학연구원(RIST) 본원에서 산·학·연 간담회를 주재하고, ‘탄소중립 기술지원단’ 출범 계획을 밝혔음
- 오태석 차관은 탄소중립 혁신기술을 산업 현장에 적용한다는 비전으로, 탄소중립 기술지원단 출범, 탄소중립 중점연구실 지정, 인력 양성 등 산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일렀음
- 과기정통부는 산·학·연이 함께하는 ‘탄소중립 기술동행 프로젝트’를 통해, 혁신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임

## 1. “삼성이 돈 냄새를 맡았다”…‘암모니아’에 공들이는 기업들 왜

(중앙일보, 2023.02.05) 이동현 기자

- ‘고약한 냄새’가 나는 비료 원료 정도로 여겨졌던 암모니아가 미래 청정에너지의 ‘열쇠’로 떠오르고 있음
- 암모니아를 석탄과 함께 태우는 암모니아 혼소발전도 가능하고, 수소로 바꿔 LNG 발전에 사용해도 되기 때문임
- 삼성은 건설 계열사들이 청정암모니아와 수소 인프라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, 현대자동차그룹은 수소연료전지차에 들어갈 수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암모니아 분해기술을 개발 중임
- 롯데케미칼은 2030년까지 120만t의 청정수소를 생산한다는 계획을 내놨고, 혼소발전 분야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는 수소혼소발전을 위한 가스터빈 개발과 복합발전소를 건설하고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개발했음

## 2. LG그룹, 대규모 투자에 ‘ESG 지표’ 적용

(서울경제, 2023.02.07) 전희윤 기자

- LG그룹이 탄소 감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, 대규모 투자에 환경·사회·지배구조(ESG) 체크리스트를 적용함
- 이는 해외 각국에서 시행을 앞둔 친환경 정책에 맞춰 선제적으로 경쟁력을 강화, 투자 허가와 인센티브 혜택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됨
- LG그룹은 최근 공개한 ‘LG 넷제로(탄소 순배출 0) 특별 보고서’에서 기후변화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정책과 프로세스를 계획하고 있으며, 그 중인 방안 중 하나가 ‘대규모 투자 시 적용할 수 있는 ESG 체크리스트 마련’이라고 밝혔음
- LG가 개발 중인 ESG 체크리스트는 대규모 투자에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비용으로 추산하고, 이를 상쇄할 재생에너지 사용량 등 친환경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일 것으로 예상됨

## 3. 김준 SK이노 부회장 “플라스틱·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확대할 것”

(머니S, 2023.02.06) 김동욱 기자

- 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이 오는 2062년 ‘올 타임 넷제로(All Time Net Zero)’ 달성을 위해, 올해 ‘카본 투 그린(Carbon to Green)’ 전략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각오를 밝혔음
- 올 타임 넷제로는 회사창립 100주년이 되는 2062년 창립 이후의 직접 탄소 배출량 4억8000톤과 동일한 규모로 글로벌 탄소 감축을 하겠다는 전략임
- 김 부회장은 스키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SK이노베이션 계열 회사들이 효과적인 탄소감축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방법론을 개발 중이라며, 플라스틱 리사이클, 폐배터리 재활용(BMR) 등 친환경 사업·제품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음
- 그는 앞으로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통해 "그린 포트폴리오 디자이너&디벨로퍼(Designer&Developer)라는 정체성 추구해 시장에서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겠다"고 전했음

# Weekend ESG Insight

이슈 검색기간 : 2023.02.03(금) ~ 2023.02.09(목)

제공일시 2023 02 17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

## 미 재무부, 공정한 전환 위해 5조원 세금공제

(임팩트온, 2023.2.15) 송준호 기자

- 지난 3일(현지시간), 월스트리트저널(WSJ)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(이하 SEC) 관계자의 입을 통해 투자자, 기업, 국회의원들을 반발에 따라 조치를 완화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함
- 미국 재무부는 지난 13일(현지시각) 40억달러(약 5조원)의 세금공제를 에너지 및 탈탄소화 프로젝트에 제공하겠다는 지침을 발표함. 세금공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(IRA, Inflation Reduction Act)에 근거함
- 전체 공제금 중 16억달러(약 2조원)는 광산과 화석연료발전소의 폐쇄로 인해 실업 등의 직접 피해를 본 지역사회에 제공됨. 재무부가 이른바, 공정한 전환(Just transition)을 위한 세금 정책을 실행하겠다는 의미임
- 재무부는 에너지 사업 공제 13조, 지역사회에는 5조원을 할당할 계획임. 정책은 다가올 5월 31일부터 적용되며, 주무부서는 재무부가 맡았고 국세청과 에너지부와 협업하여 정책을 이행함
- 미국 정부는 에너지 프로그램(Qualifying Advanced Energy Project Credit)을 통해 ▲신재생에너지의 직접 생산 기술 ▲신재생에너지 저장고 및 축전 시스템 ▲에너지 절약 시스템 ▲에너지 운송 효율화 시스템 ▲탄소 저장고 및 격리, 관리 시스템에 세금공제 혜택을 부여함
- 재무부가 제시한 관련 지침은 이산화탄소 포집 및 격리, 무배출 또는 저배출 에너지로 수소 생산, 재생가능 바이오 연료, 전기차 배터리 생산, 충전 인프라 등의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도 제시함
- 미국 의회는 이 프로그램에 총 100억달러(약 13조원) 상당의 세액 공제를 승인함. 의회는 폐광이나 폐쇄된 석탄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사회의 프로젝트에 최소 40억달러를 할당하도록 요구함
- 재무부는 환경 정의(Environmental Justice) 지침도 발간함. IRA는 태양광과 풍력 프로젝트에 기본적으로 30%의 세금공제를 제공함. 이 지침은 저임금과 빈곤한 지역 사회에서 태양광 혹은 풍력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에 10%부터 최대 20%의 추가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
- 추가 공제는 연간 총 1.8기가와트의 발전 용량과 프로젝트당 5메가와트로 제한됨.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, 미 재무부 관계자는 “일반적인 지역사회 태양광 프로젝트가 1~5메가와트 수준이므로, 추가 공제로 연간 1000개 이상의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”고 말함
- 기후 변화와 불평등 이슈가 결합한 공정한 전환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님. 재무부의 환경 지침이 세액 공제를 통한 간접 지원이라면, 저스티스 40 이니셔티브와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은(IIJA) 직접 지원을 통해 공정한 전환을 달성함
-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초 '국내외 기후위기 타개(Executive Order on Tackling the Climate Crisis at Home and Abroad)' 행정명령(EO) 14008호에 서명함. 행정명령 14008호가 저스티스 40 이니셔티브의 출범으로 이어졌고, 기후 기술과 신재생에너지 투자로 얻는 이익의 40%를 소외된 지역사회에 투입한다는 게 주요 내용임
-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(IIJA)은 2021년 11월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제정됨. 일자리법이 통과되고 6개월간 50개 주에서는 약 4300개 프로젝트에 1100억달러(약 150조원)가량이 투입됨. 일자리법은 미국의 노후화된 수도 인프라 개선과 오염물질 제거를 포함한 시골 지역의 수도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550억달러(약 70조원)를 투자하는 계획도 담고 있음